

새 정부에 바란다

韓 斗 鎭

〈대한병원협회 회장〉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부가 탄생했다.

‘국민의 정부’란 이름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는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와 아울러 대통령 자신이 평생을 걸고 일관된 실천과제로 삼았던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이룩하여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정신혁명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을 집권 5년간의 통치 의지로 천명한 바 있다.

병원계는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접하면서 과거 정부가 경제개발을 우선과제로 삼는 과정에서 시대와 사회발전의 뒷전으로 밀쳐두었던 보건의료 정책이 제 자리를 찾

고 지난 20여년간 왜곡된 의료보험제도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에 차 있다.

그동안 병원계는 정부의 의료보장정책의 그늘에서 일관된 저수가 정책과 규제일변도의 병원정책으로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려 오던중 IMF한파까지 겹쳐 의료장비 리스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 추가부담, 진료용 재료 수급난, 차입금 이자 지급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금년들어 이미 2개 병원이 화의 신청을 한바 있어 의료환경의 개선이 없이는 앞으로도 몇개 병원이 더 무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위기는 단위 병원의 문제나 병원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의료공급 기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정부의 문제해결 인식이 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히고 있는 “소외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

는” 일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오늘 우리 병원들이 이처럼 존폐의 위기에 서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병원정책 수립과 그 수행과정에서 장기적인 목표 설정에 따른 일관된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병원을 조여온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될 무렵, 의료보험제도는 20년의 시행기간 동안 의료보장의 양적 팽창에 급급한 나머지 어느 나라에서도 그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제계약, 일관되게 낮은 관제수가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왜곡과 변칙이 아니고는 의료기관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의료보험은 기형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정책수립과 그 발전과정에서 철학이 빈곤하다 보니 병원은 의료외적 환경 변화에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최근의 단적인 예가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환율급등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진료재료대 등의 폭등으로 병원들은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장비비스, 경상수지 적지는 물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은행등 금융 차입규모가 높았던 병원들은 고금리체제에서 결국 문을 닫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병원계는 먼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 아래에서 국민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민간의료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새 정부가 병원정책의 틀을 새로 짜줄 것을 주문한다.

이는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김대통령이 향후 5년간 펴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제도를 틀지우는 의료보험 관련 법과 고시는 의료원가 기준 최하수준의 의료제공을 하는데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묶어놓고 덧붙여 병원의 주요 재원인 진료수는 정부의 물가논리를 앞세워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저수가 정책으로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갖가지 자기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오로지 성의를 다해 진료하는 것으로 그 직분을 다하는 병원인들이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법정에서 서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새 정부는 의료기관을 옥죄고 있는 갖가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병원경영을 정상화시킨다는 뚜렷한 목표아래 의료보험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환자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최근 3년동안 전체 병원수의 10%선인 81개 병원이 폐업했으며 지난 한해만도 44개 병원이 문을 닫고 12개 병원이 경영난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등 병원경영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병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와 함께 불합리한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의료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병원관련 조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의료기관이 본연의 소임인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병원경영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 개선불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전 병원에 전액지급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DRG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의료비 절감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나 의료의 질 저하 및 의료분쟁 심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므로 제도도입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는 병원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병원표준화심사와 상당부분 중복되므로 현행 병원표준화심사를 보완하여 병원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새 정부는 현재 우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더라도 의료야 말로 의식주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이란 시각으로 ‘병원살리기’에 특단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